

#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09
----------	------

제출년월일 : 2009. 2. 5.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안이유

- 우리시 인구의 4%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참여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이미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주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주요골자

가. 안 제3조의2에 거주이주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나.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시와 거주이주민,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 안 제7조에 거주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라. 안 제8조에 인권침해 발생시 별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 안 제13조에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거주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국가인원위원회법 제2조 및 제20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1,180천원

○ 인권교육 1,180천원

☐ 사전예고결과 : 별첨

○ 입법예고 : 2008. 11. 4 ~ 11.20(20일간)

○ 공 청 회 : 2008. 11.27

☐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방침결정문



#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모든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거주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번영하는 안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거주이주민을 위한 모든 시책은 인권 증진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거주이주민”이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혼인·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거주이주민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주이주민이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거주이주민 등의 권리 및 책무)** ① 거주이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를 불문하고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거주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거주이주민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책무)** ① 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내·외국인의 관습과 문화가 존중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사회단체는 거주이주민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인권문화 확산, 지역주민 인권 의식 고양 등 지역사회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주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주이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제8조 (거주이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 ① 시장은 거주이주민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 침해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주민,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침해 발생시 권리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편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거주이주민 인권관련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시책 중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서 작성 등)** 시장은 매년 전년도의 인권 증진 활동내용과 시책추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산시 거주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인권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 제3장 안산시 거주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

**제13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거주이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거주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거주이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거주이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거주이주민의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인권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거주이주민 등 이주민정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1회 이상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업무담당과(소)장이 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17조 (비밀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위원회 경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및 제20조

- 제2조(정의)

1. “인권 ‘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20조(국가기관과의 협의)

- ①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전예고 결과 : 의견8건(반영5건, 미반영 3건)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결과

- |  |   |
|--|---|
| 1. 거주외국인에 대한 용어 부적절  | 1. 안 제3조에 거주외국인→거주이주민으로 반영                    |
| 2. 기존 지원 조례와의 상충 여부  | 2. 기존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상충되지 않아 미반영                 |
| 3. 제5조 1항의 ‘자신의 법적인 지위를 불문하고’에서의 표현 완화                               | 3. 인권조례라는 취지에서 미반영                            |
| 4. 제3장 거주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와 관련,<br>4.1. 제12조의 자문과 심의 기능 약함, 보다 명확히 권한 규정 필요 | 4.1. 미반영                                      |
| 4.2. 제12조에 시장과 위원회는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연 1회이상), 그 내용 공개 근거 마련               | 4.2. 안 제11조 신설하여 반영                           |
| 4.3. 제13조 구성 비율을 구체적 명시, 거주 외국인 할당제나 의무화 규정                          | 4.3. 안 14조에 거주이주민 기 명시                        |
| 4.4. 권리구제의 책임성 및 이행을 위해 법률 지원단 또는 거주외국인고충처리위원회를 두는 방안                | 4.4. 안 8조에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               |
| 5.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를 위한 구체적 제도적 장치  | 5. 안 8조2에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편의 제공과 인권지원센터 운영을 반영하였음. |



#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09
----------	------

제안년월일 : 2009. 3. 4.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1. 수 정 이 유

- 조례안의 제명 및 조문내용 중 일부 용어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 일부를 적절한 용어 및 내용으로 수정하고, 또한 민간단체 등에 지원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 2. 주 요 골 자

- 조례 제명을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함.
- 제1조 중 “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각각 수정함.
- 제2조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수정함.
- 제3조 제2호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각각 수정함.



- 제4조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수정함.
- 제5조의 제목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동조 제1항 중 “거주이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를 불문하고”를 “외국인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로 각각 수정하고, 동조 내용 중 일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함.
-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수정함.
- 제2장 제목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수정함.
- 제7조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수정함.
- 제8조 제목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동조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각각 수정함.
- 제9조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수정함.
- 제10조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함.
- 제11조 중 “거주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를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로 수정함.
- 제2장 제목 “안산시 거주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를 “안산시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로 수정함
- 제13조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거주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를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로 각각 수정함.



- 제14조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이주민정책”을 “외국인정책”으로 각각 수정하고, 외국인 주민을 1/3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서 조항을 신설함.
- 제15조 제3항 제1호 중 “연1회”를 “연2회”로 수정함.



#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각각 한다.

제2조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3조 제2호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각각 한다.

제4조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동조 제1항 중 “거주이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를 불문하고”를 “외국인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로 각각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모든 주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동조 제2항으로 하여 동조 제2항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2장 제목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7조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동조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각각 한다.

제9조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외국인 인권 증진에 관한 시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중 “거주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를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로 한다.

제3장 제목 “안산시 거주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를 “안산시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거주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를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로 각각 한다.

제14조 제2항 중 “거주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이주민정책”을 “외국인정책”으로 각각 하고, 동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주민을 1/3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 중 “연1회”를 “연2회”로 한다.



#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외국인주민----- ----- -----외국인주민----- -----.		
제2조 (기본이념) ① 모든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거주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번영하는 안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외국인주민----- ----- ----- -----.		
② 거주이주민을 위한 모든 시책은 인권 증진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② 외국인주민-----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정의) ----- -----.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1.----- -----.		



원	안	수	정	안
2	“거주이주민”이란 <u>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혼인·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u>	2	“외국인주민”이란 <u>안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u> ----- ----- -----.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u>거주이주민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u>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 <u>외국인주민</u> ----- ----- -----.	
②	시장은 <u>거주이주민이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 <u>외국인주민</u> ----- ----- -----.	
제5조 (거주이주민 등의 권리 및 책무) ①	거주이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를 불문하고 <u>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u>	제5조 ( <u>외국인주민</u> 등의 권리 및 책무) ①	<u>외국인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u> -----.	
②	<u>모든 주민은 거주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u>	②	<u>모든 주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③	<u>거주이주민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③	<u>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6조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책무) ①	기업은 「 <u>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u> 」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책무) ①	----- ----- ----- -----.	
②	기업은 <u>내·외국인의 관습과 문화가 존중되는 직장분위기 조성</u> 에 노력하여야 한다.		<u>&lt; 삭제 &gt;</u>	
③	시민단체는 <u>거주이주민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인건문화 확산, 지역주민 인권의식 고양 등 지역사회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	②	----- <u>외국인주민</u> ----- ----- -----.	



원	안	수	정	안
<b>제2장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 시책의 수립 및 추진</b>		<b>제2장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시책의 수립 및 추진</b>		
<b>제7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b>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거주이주민</u> 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b>제7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b> ----- ----- <u>외국인주민</u> ----- ----- -----.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1. 인권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		
2.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2. ----- -----		
3.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 조성		3. -----		
4. 그 밖의 <u>거주이주민</u>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u>외국인주민</u>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u>거주이주민</u>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매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③ 시장은 <u>외국인주민</u>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매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b>제8조 (<u>거주이주민</u>에 대한 인권 증진) ①</b> 시장은 <u>거주이주민</u> 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주민,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b>제8조 (<u>외국인주민</u>에 대한 인권 증진) ①</b> ----- <u>외국인주민</u> ----- ----- ----- -----.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b>제9조 (실태조사)</b> 시장은 <u>거주이주민</u> 인권 관련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b>제9조 (실태조사)</b> ----- <u>외국인주민</u> ----- ----- -----.		



원	안	수	정	안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시책 중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시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서 작성 등) 시장은 매년 전 년도의 인권 증진 활동내용과 시책추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증진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서 작성 등) ----- ----- -----외국인주민인권 증진위원회----- ----- ----- ----- -----.			
제12조 (국제협력 강화)(생략)	제12조 (국제협력 강화)(원안과 같음)			
제3장 안산시 거주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	제3장 안산시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			
제13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거주이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거주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거주이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거주이주민의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외국인 주민-----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 원회----- ② ----- 1. 외국인주민----- ----- 2. 외국인주민----- ----- 3. -----외국인주민----- -----			
제14조 (구성) ① (생략)	제14조 (구성) ①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공무원, 시위원, 인권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u>거주이주민</u> 등 <u>이주민정책</u>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lt;단서 신설&gt;</p> <p>③ (생 략)</p> <p><b>제 15조 (운영) ① ~ ②(생 략)</b></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p> <p>1. 정기회 : 연 1회 이상</p> <p>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p> <p>④ ~ ⑤ (생 략)</p>	<p>② ----- ----- -----<u>외국인주민</u>----- --<u>외국인정책</u>----- ----- ---. 다만, 외국인주민을 1/3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p> <p>③ (원안과 같음)</p> <p><b>제 15조 (운영) ① ~ ② (원안과 같음)</b></p> <p>③ ----- -----.</p> <p>1. 정기회 : 연 2회 이상</p> <p>2. ----- -----</p> <p>④ ~ ⑤ (원안과 같음)</p>